출장결과보고

OECD EPC WP1 회의 참석

2026. 11. 02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 출장 개요

□ (목적)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 작업반(WP1) 회의 참석

○ OECD EPC WP1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 디지털 시대의 기업투자, 공공부문 고용, 최소자본금 규제, AI와 성장, 기후정책 프레임워크, 재해의 국제 전파와 보험, 대외 무역충격 등에 관하여 토론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및 방문기관: OECD 본부(프랑스 파리)

○ 출장기간: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5일(일), 3박 5일

○ 출장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문윤상 연구위원

○ 예산과목: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 주요활동

○ WP1 회의 참석 및 토론 참여

2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안)
10.21(수)	11:20 ~ 18:30	인천공항 출발 파리공항 도착
10.22(목)	09:30 ~ 18:00	WP1 회의 (1일차)
10.23(금)	09:30 ~ 14:30 15:00 ~ 18:00	WP1 회의 (2일차) 재정경제부 출장단과 사후 랩업 회의
10.24(토)	20:35 ~	파리공항 출발
10.25(일)	~ 15:50	인천공항 도착

* 현지 시간 기준임.

3 컨퍼런스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No. 1 on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Analysis)

ㅇ 일시 및 장소: 2026.10.22.(목)~23.(금), 파리 OECD 본부(OECD Conference Centre CC1)

ㅇ 참석: OECD 회원국 대표, 가입 후보국 대표, Business at OECD(BIAC), TUAC, 사무국 등

- 한국 대표단: 김연준(주 OECD 대표부), 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

ㅇ 안건: 6개 정규 세션 및 1개 워크샵(AI와 성장)

1. Business Investment in the Digital Age and the Role of Policies (22일 오전 Part 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기업투자가 OECD 전반에서 장기간 부진한 가운데 소프트웨어·데이터·ICT 장비 등 디지털 자산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제도나 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ㅇ 산업×자산 단위 패널자료와 국소투영(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제품시장 경쟁, 무역개방, 금융발전, 노동시장 규제, 숙련 등 5개 정책 영역의 개혁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최대 5년간 추정함.

□ (분석 결과) 모든 영역의 개혁이 자본축적을 높이며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누적됨.

ㅇ 대규모 개혁 시 총자본스톡은 2년 후 0.3%, 5년 후 1.9% 증가하며, 디지털 자본은 약 4.1%로 그 두 배 이상 증가함.

ㅇ 숙련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고, 금융발전(특히 시장기반 금융·벤처캐피털)은 모든 자산 유형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영역임.

ㅇ 국가별 시뮬레이션에서 모범사례 대비 격차를 줄이면 5년 후 자본스톡이

1.5%(일본)~8%(콜롬비아) 증가하며, 영역별 기여가 국가마다 달라 국가별 맞춤형 개혁이 필요함.

ㅇ 한국은 약 2.7%로 모범사례 대비 격차가 적으며, 특히 숙련은 모범사례로 분류되어 이득의 대부분이 제품시장 경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발생함.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이탈리아는 중요한 이슈에 분석 틀을 제공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들며 한계를 지적함.

ㅇ 산업 노출도가 단일국(미국) 자료에 의존하고, 정책 지표가 실제 집행을 반영하지 못하며, 무형자산이 누락되었음.

□ 독일, 멕시코, 영국 등 다수의 회원국은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함.

ㅇ (독일) 세제・에너지가격・도산제도・인프라 등이 누락되었고, 금융발전・숙련은 정책수단이 아닌 결과변수에 가까움.

ㅇ (멕시코) 시뮬레이션 이득 상위국이 추정 표본 밖에 있어 선진국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ㅇ (영국) 노출도가 가장 낮은 산업의 효과를 0으로 가정하여 결과가 상한일 수 있음

ㅇ 일본, 벨기에, 스웨덴 등은 IT・이공계 인력 부족 등 숙련 문제를 공유하였으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디지털 자본 중심의 결과 제시와 미국 빅테크 제외 시의 강건성을 요청함.

□ 저자들은 미국 빅테크(미국 디지털 투자의 약 25%)를 제외해도 결과가 유사하고, 최근 데이터센터 중심의 투자 급증에도 필요한 정책 여건은 같아 결론이 유효하다고 답변함.

ㅇ (추후 진행 계획) 법령상 규제와 체감 규제의 차이를 AI 기반 법령 분석으로 검토하고, 개혁 간 보완성과 기업 규모 차원의 분석을 추진할 계획

2. The Anatomy of Public Sector Employment: Stylised Facts and

Policy Considerations (22일 오전 Part I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공공부문은 OECD 노동자 약 5명 중 1명을 고용하나 생산성의 측정·비교가 어려워, 인력 특성을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핵심 경로로 보고 분석함.

ㅇ 인력구조, 임금, 임금 외 일자리 질, AI 준비도를 국가 간 비교함.

□ (분석 결과) 공공부문 인력은 국가·분야별 출발점이 크게 다르나, 임금·근로조건·AI 활용 면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음.

ㅇ 일반정부 고용은 OECD 평균 총고용의 약 18%(국가별 10% 미만~약 30%)이며, 지난 20년간 평균 약 2%p 감소함.

ㅇ 여성·고학력·고령층 비중이 높고 청년층은 과소하며, 행정·교육·보건 분야에 집중됨.

ㅇ 한국은 일반정부 고용 비중이 약 8%로 OECD 최하위권이며, 55세 이상 과대표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제시됨.

ㅇ 개인 특성을 통제하면 공공부문 임금 프리미엄은 작거나 오히려 페널티이며, 특히 고학력·임금 상위층에서 불리함.

ㅇ 통념과 달리 기간제 등 비정규 계약 비중이 민간보다 높고, 근무시간 유연성·경력 전망이 약함.

ㅇ AI 노출도는 민간보다 다소 높으나 실제 활용은 낮으며, 이는 노동자 역량보다 도구·데이터·관리자 지원 등 조직 역량의 문제로 해석됨.

□ (정책 시사점) 일괄적인 임금·인원 확대보다 인력난이 심한 직종에 자원을 집중하고, 행정·교육·보건 등 분야별 접근과 업무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프랑스는 공공부문의 인력 유치 문제가 임금뿐 아니라 근로·고용 조건에서도 비롯된다는 연구의 진단에 공감하며 자국 사례를 소개함.

- ㅇ 프랑스 공공부문의 기간제 비중은 약 20%로 민간(10%)의 두 배이며, 보건(「Ségur de la santé」, 연 110억 유로)과 교육(2020~2024년 77억 유로) 분야의 인력 유치를 위해 임금을 인상함.
- ㅇ 프랑스 공공부문 AI 사용률 3%는 하한으로 보이며, 보안이 공공부문 도입의 핵심 조건이므로 낮은 사용률은 신중한 도입을 반영할 수 있어 보안이 확보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아일랜드, 멕시코,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수의 회원국은 고숙련 전문인력의 민간 이탈과 보수 결정 구조의 경직성 문제를 공유함.

- ㅇ (덴마크) 공공부문 보수가 일괄 인상 방식으로 결정되어 수요가 많은 노인 돌봄・간호 인력의 임금 조정이 어려움.
- ㅇ (멕시코) 헌법상 공무원 보수가 대통령 보수를 넘을 수 없어 전문인력 유지가 어려움.
- ㅇ 핀란드는 행정기관이 기밀 정보를 다뤄 범용 AI 도구 사용이 제한된다고 업급하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공직 지원자 감소와 고령 퇴직에 대응한 채용 제도 개편 사례를, 영국과 EU는 연금 등 임금 외 보상을 포함한 비교와 인과 해석에 주의할 것을 요청함.

□ (대한민국) 한국의 낮은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규모보다 구조의 차이로, 전력・가스, 철도, 공항 등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함.

- ㅇ 한국도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 인력과 숙련 인력이 공공기관을 떠나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발전 5사・철도 운영사 등 유사 기능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임을 소개함.
- ㅇ 통합의 목적은 인력 감축이 아니라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며, 중복된 지원・행정 업무를 줄여 그 자원을 AI 등에 투자하고 공통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화 경로라는 점을 공유함.

3.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and Business Dynamism: New Cross-Country Evidence (22일 오전 Part II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최소자본금(MCR)은 채권자 보호와 부실 사업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나 존립 가능한 기업의 진입도 막을 수 있어, 그 효과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근거가 요구됨.

- ㅇ PMR 방법론을 바탕으로 43개국(OECD 38개국, 비OECD EU 5개국)의 1991~2025년 MCR 연간 자료를 신규 구축함.

□ (분석 결과) MCR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으며, 사실상 폐지 이후 신설법인은 늘었으나 퇴출은 늘지 않음.

- ㅇ MCR 중위값은 1990년대 초 1인당 GDP의 약 4분의 1에서 2024년 0.001%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 기준 28개국이 폐지했거나 무의미한 수준임.
- ㅇ 한국은 사실상 폐지 사례에 포함되었으나, 다른 창업 절차 개편과 동시에 시행되어 사건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됨.
- ㅇ MCR을 사실상 폐지한 후 신설법인은 개혁 당해 약 8%, 4년 후 약 18% 증가하였으나, 퇴출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
- ㅇ 과거의 MCR 인하로 2024년 약 23만 1천 개 기업이 추가로 진입(관측 진입의 약 9%)한 것으로 추산되며, 개혁이 없었다면 2004년 이후 진입률이 2.0%p가 아니라 2.8%p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됨.

□ (정책 시사점) MCR은 채권자 보호 수단으로서 표적이 부정확하므로 효과적인 도산제도와 이사 책임 등 위험별 표적 수단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저자본 법인 형태를 만들기보다 기존 형태 내에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벨기에는 논문의 결과를 평가하면서도 퇴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진입 기업의 질이나 채권자 보호가 그대로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국 사례를 소개함.

- ㅇ 2019년 표준 유한책임회사의 최저자본금(18,550유로)을 폐지하고, 최소 2년의 재무계획 제출과 초기 자원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의 창업자 책임 등 사

업별 적정성 기준으로 대체함.

ㅇ 벨기에 기업역동성의 문제는 진입보다 스케일업 부족이며, 첫 고용 사회보험료 면제 정책(2016년)도 1인 고용 기업 수만 늘리고 그 성과는 낮았다는 점에서 기업 수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MCR 인하의 부작용과 신호 기능을 지적함.

ㅇ (스웨덴) 단계적 인하 이후 신설 법인은 늘었으나 생산성 개선은 없었으며, 경제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제기됨.

ㅇ (이탈리아) MCR은 주주의 헌신을 보여주는 신호 기능이 있으며, 은행이 저자본 기업에 추가 보증을 요구함.

ㅇ (아일랜드) 기업 단위 행정자료로 진입 기업의 생존・성장・고용을 추적할 것을 제안함.

□ 저자들은 MCR 폐지 자체보다 이를 대체하는 채권자 보호 체계의 설계가 핵심이며, 진입 이후의 성장과 스케일업 장벽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답변함.

4. Workshop on AI and Growth (22일 오후)

Ⅰ. 안건 주요내용

□ (개요) 3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OECD・Ipsos・Google이 공동 수행한 AI 활용 글로벌 서베이(62개국)의 초기 결과가 처음 공개됨.

□ (세션 1: AI 경제의 미래) 성장・노동시장 시나리오를 논의함.

ㅇ 영국 AI Economics Institute(2026년 6월 출범)는 행정자료 기반 실증연구와 시나리오 모형화를 병행하며, 노출지수보다 실제 활용의 깊이를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함.

ㅇ OECD는 향후 10년간 AI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 0.4~1.2%p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24개국 기업 자료 분석상 전체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ICT 서비스 등 노출 부문에서 도입 3~4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ㅇ AI 선도 기업과 초기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의 마크업이 상승하여 경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됨.

□ (세션 2: AI 확산의 패턴과 요인) OECD・Ipsos・Google이 공동 수행한 AI 활용 서베이 결과를 발표함.

ㅇ AI 사용률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50~75%이나, 매일 업무에 사용하는 집약적 사용은 OECD 평균 약 6% 수준에 그침.

ㅇ 14개국 노동자・고용주 조사에서 AI 도입 고용주는 인원 감소보다 증가를 보고할 가능성이 3.5배 높았으며, 미사용 이유 1위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이었음.

□ (세션 3: 정책의 역할) 패널 토론에서 구속 제약은 기술이 아니라 느린 확산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ㅇ 경영 숙련을 포함한 숙련, 경쟁과 기업역동성, 중소기업 지원,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핵심 과제로 제시됨.

ㅇ OECD 국가들이 업무교육 중 AI와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다루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훈련 과정 개편이 필요함.

Ⅱ. 논의사항

□ 스웨덴,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등은 자국의 AI 도입 현황을 공유하며 아직 고용 감소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언급함.

ㅇ (이스라엘) 노동자의 57%가 AI를 사용하는 등 확산은 노동자로부터 상향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나, 지속적인 생산성 이득에는 숙련・경영・업무조직에 대한 보완투자가 필요함.

ㅇ (캐나다・독일) 도입 여부보다 사용 강도와 보완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OECD는 서베이 초기 결과를 12월 OECD 경제전망에 반영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ㅇ (추후 진행 계획) 노동시장 마찰을 반영한 단기 전환 시나리오와 각국 AI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

5. First Insights from the Macrostructural Climate Framework: Assess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23일 오전 Part 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은 GDP・투자・에너지・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거시경제 정책분석에 통합하기 위해 거시구조 기후 프레임워크(MCF)를 개발함.

ㅇ 기후피해, 감축・적응 정책, 민간의 대응, 재정을 하나의 동태 일반균형모형으로 통합하고, 탄소 외부성 외에 녹색자본 학습효과, 녹색혁신 지식파급, 적응 파급효과 등의 시장실패를 정책수단과 연결함.

□ (분석 결과) 영국에 적용한 결과, 단일 정책보다 정책 조합이 성장과 재정을 함께 개선함.

ㅇ 탄소세 단독 시 2030년 배출이 29% 감축되고 GDP는 기준선 대비 약 1% 하락하나, 보조금과 적응 투자를 포함한 패키지는 2040년 GDP를 기준선 대비 약 1.9% 높임.

ㅇ 같은 배출 경로도 정책 조합에 따라 경제적 비용이 크게 다르며, 재정여력・초기 에너지 구성・피해 노출도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달라짐.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스웨덴은 정책을 함께 평가하고 각 수단을 서로 다른 시장실패에 연결한 점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완을 요청함.

ㅇ 최적 목표 수준을 찾는 것보다 주어진 배출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정책조합 분석이 더 설득력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CBAM)・탄소누출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집계 결과로는 단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구・부문・지역별 분배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회원국은 국가별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확장을 요청함.

ㅇ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헝가리, EU 등 다수의 회원국은 개방경제 확장, EU ETS와의 연계, 왜곡적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물가·통화정책 반영 등을 요청함.

ㅇ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은 자국 모형과의 비교·연계 의사를 밝혔으며, 검증을 위한 모형 코드 공개 요청도 제기됨.

□ 저자들은 개방경제 확장이 다음 단계이며, 배출 목표를 고정한 실험은 사실상 ETS와 동일하다고 답변함.

ㅇ (추후 진행 계획) 국가 조건을 입력해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OECD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회원국 보유 모형에 대한 설문과 ENV-Linkages 모형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

6. When Disasters Travel: Insurance Coverage and Global Supply-Chain Resilience (23일 오전 Part I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자연재해의 영향은 국제 공급망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파되나, 재해 노출이 큰데도 보험 보장이 낮은 공급망 거점 국가가 많음.

ㅇ 80개국·50개 산업(2000~22년)의 재해 손실·보험 자료와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결합하여 재해의 국제 전파 효과와 보험의 완화 효과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재해는 공급충격으로 작용하여 피해국에서 투입물을 조달하는 해외 하류 산업의 산출을 감소시키며, 피해국의 보험은 이를 완화함.

ㅇ GDP 1% 규모의 재해는 평균 노출 수준에서 해외 하류 산업 산출을 직접 연결로 0.02%, 간접 연결로 0.05% 감소시키며, 노출 상위 10% 산업은 약 0.9% 감소함.

ㅇ 피해국의 보험 보장률이 10%p 높으면 공급망을 통한 직접 손실의 약 30%가 상쇄되어, 재해보험은 국제적으로 양(+)의 파급효과를 가짐.

ㅇ 남은 해외 공급처가 덜 집중되어 있으면 손실이 약 40% 작으나, 국내 조달

비중의 추가 완충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ㅇ 한국의 연평균 손실은 약 0.45%로 OECD 평균(0.3%)보다 높게 나타남.

□ (정책 시사점) 재해 회복력은 글로벌 공공재이므로 핵심 공급망 거점의 민관 재해보험 확대, 직접 공급자 너머의 공급망 투명성 제고, 공급처의 지리적 다변화가 필요하며, 보험은 예방·적응 조치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해야 함.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일본은 국내외 재해의 공급망 파급을 정량화한 점을 평가하고, 보험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고려를 요청함.

ㅇ 동일본대지진 당시 공급망 차질의 영향(GDP 약 0.41%)이 직접 생산 영향(약 0.11%)보다 컸던 경험을 소개함.

ㅇ 관대한 공적 지원이 보험 가입을 위축시키는 자선 위험(charity hazard)과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료 상승·보험 철수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일본 기업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50% 미만이며, 업무연속성계획(BCP) 공공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인증 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함.

□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멕시코 등은 자국의 재해보험 제도를 소개함.

ㅇ (프랑스) 민간 보험과 국가 보증 공공 재보험을 결합한 자연재해 보상제도로 보장률이 100%에 가까움.

ㅇ (이탈리아) 2024년부터 기업의 자연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ㅇ (멕시코) 국가 차원의 재해채권은 발달하였으나 가계·중소기업 보험시장은 얕음.

ㅇ EU, BIAC 등은 기업 네트워크 단위 분석, 보호 격차의 원인(공급 또는 수요), 민관 협력의 민간시장 구축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함.

□ 저자들은 보험 가입을 늘리는 요인은 이번 분석 범위 밖이며, 비교 가능한 보험 자료는 감독당국이 보유하고 민감하여 국가 간 분석에는 상당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ㅇ 의장은 국제적 파급이 있다면 각국 정부가 위험 풀을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나, 다변화의 주체는 기업이어서 정부가 유도하기는 어렵다

고 정리함.

7. How Do Imports Respond to External Trade Shocks? Evidence on Heterogeneous Effects (23일 오전 Part III)

Ⅰ. 안건 주요내용

□ (배경) 최근의 세계적 공급 차질로 소수 공급처에 의존하는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다변화가 취약성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가 정책 과제로 제기됨.

- ㅇ 76개국·23개 산업(1996~2022년) 패널자료로, 중력모형의 수출국×산업×연도 고정효과로 식별한 수출 측 충격과 CIF-FOB 마진 변화로 측정한 운송비용 충격을 수입 비중으로 가중하여 국소투영으로 추정함.

□ (분석 결과) 수입 집중도가 대외 무역충격의 전달에 중요하게 작용함.

- ㅇ 수출국 측 1표준편차 양(+)의 충격에 수입이 즉시 약 5.5% 증가하고, 운송비용 1표준편차 상승에 수입이 1년 후 약 2% 감소함.
- ㅇ 공급처가 집중된 산업(금속광, 석유정제, 조선 등)은 양·음의 충격 모두에 더 크게 반응하며, 그 차이는 충격이 클 때 커짐.
- ㅇ 상류 산업,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 단순한 제품일수록 반응이 크며, 운송비용 상승의 효과가 같은 폭의 하락 효과보다 큰 비대칭이 존재함.

□ (정책 시사점) 일괄적인 다변화보다 대체가 어려운 핵심 상류 투입재를 중심으로 한 위험 기반 표적 다변화와 대체 공급처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정책을 권고함.

Ⅱ. 논의사항

□ 리드 스피커인 호주는 무역자료로는 1차 공급자 너머의 취약성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취약성·중요성·잔여위험·비례적 대응의 4단계 공급망 회복력 평가 틀과 요소비료 수입 차질 대응 사례를 소개함.

- ㅇ 호주는 요소비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며 2025년 수입의 62%가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위기 정점에 국내 요소 가격이 80% 이상 상승하였으나 민간이 동남아 등으로 조달처를 전환하여 현재 수입이 예상 수요의 103% 수준임.
- ㅇ 비축·온쇼어링 등 고비용 개입은 취약성과 중요도가 모두 높은 공급망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멕시코 등 여러 나라는 분석의 해석상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별 결과 제공 등 정책 활용을 위한 보완을 요청함.

- ㅇ 멕시코는 명목 수입만으로는 가격·물량 효과를 구분할 수 없고, 집중도 지표가 USMCA와 같은 깊은 통합과 지정학적으로 노출된 의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FTA 체결 여부별 분석과 다변화가 이득이 되는 위험 문턱의 추정을 제안함.
- ㅇ BIAC는 민간의 다변화가 비용·경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민관 간 위험 분담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ㅇ TUAC는 핵심원자재처럼 단순한 제품도 공급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고 무역충격의 비용은 사전에 평가하기 어려워 표준적인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ㅇ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품목·공급망 단위의 분석과 국가별 결과 제공을, 태국은 중국을 제외한 강건성 검정을 제안함.

□ 저자들은 FTA 관련 변수는 중력모형에서 통제되며, 단가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가격·물량 분해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집중도 외에 산업의 중요성·지리·전환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본문에 명확히 하겠다고 언급함.

- ㅇ 의장은 이번 작업이 집중에 따른 위험을 정량화한 기여가 크나, 정부가 집중을 줄이기 위한 수단과 그 비용·편익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어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정리하고 회의를 마침.